

## 일본의 외국인활용 확대책과 한일 고용협력

- 취업難이 심각한 한국과는 반대로 일손부족難에 처해 있는 일본이 외국인 활용 확대차원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책을 검토
  - 전문기술자의 재류자격 확대와 요건완화, 입관법 개정 등이 주요 검토사항
-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각각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함은, 한국의 취업難과 일본의 일손부족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, 한일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윈윈(win-win)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음

### □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확대

- 아베 총리는 2월 20일 외국인노동자의 수용확대를 검토하기로 함
  - 제조업과 음식업에서는 실습과 유학 명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탱해 주고 있는 만큼, 만성화되는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수용 확대책을 마련할 예정임
  - 유학 명분으로 방문한 외국 인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현상을 재검토하려는 의도이나 재류의 상한이 제약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음
- 아베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에 관하여 2018년 여름에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함
  - 모테기 도시미쓰(茂木敏充) 경제재정·재생상도 기자회견에서 간병, 건설, 운수,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어떠한 능력이 최소한 필요한가를 밝혀 내겠다고 함

### □ 전문기술 분야의 재류자격 확대와 요건완화

- 현재 신흥국에 대한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한 기능 실습,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자격외활동, 고급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활용하는 전문·기술 분야 등 다수의 재류자격이 있음
  -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아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장관과 가미카와 요코(上川陽子)법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자격 중 전문·기술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방향임
- 경영, 관리, 의료, 기술·인문 지식 등 18 종류의 전문적·기술적 분야의 재류자격을 일손부족 업종에 맞추어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, 각 요건도 완화하여 외국인이 일하기 쉽도록 할 방침임


## □ 입관법 개정

- 각 업계의 관할성청이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, 그 업종을 재류자격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함
  - 빠르면 2018년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입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 외에 농업 등은 국가전략특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수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
  - 간병 분야에서는 기능실습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재입국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
-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, 일본정부는 여성과 고령자의 활약으로 2012년부터 5년간 피고용자수를 306만 명 늘렸으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
  - 외국인 활용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대응 배경임

## □ 수용 확대의 조건으로 재류기간의 설정, 단순노동 불허

- 다만 아베 총리는 수용확대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, 2월20일 회의에서도 재류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가족동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음
  - 재류의 상한은 5년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 단순노동의 수용은 인정하지 않고 영주권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민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했음
-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10월말 시점에서 128만 명으로 5년 전 68만 명에서 90%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
  - 그 중에서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유학생과 기능실습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에서 접하는 비율은 40% 이상임
  - 취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고용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임
- 원래 취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 현장에서 배려가 부족한 문제도 있음
  - 일본 법무성에 의하면 기능실습으로 입국하여 실종된 외국인수는 2017년 상반기만으로 3,000명을 넘었음. 실습선 기업에서의 인권 침해나 임금 미지불도 많음
- 미즈비시 UFJ리서치앤드컨설팅 관계자는 일본의 기술에 대한 해외로부터 동경이 있던 시대와 달리, 문호를 확대해도 좀처럼 오지 않는 시대라고 함
  - 기능실습생에 의존하고 있는 모순을 재검토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
## □ 시사점

- 현재 한국과 일본의 고용 사정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이 일손 부족으로 채용난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, 한국은 취직 빙하기라고 할만큼 취직이 어려운 상황임
  - 최근 일본은 공급자 시장이며 일본의 후생노동,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18년 봄 졸업예정인 대학생의 취직내정율은 2017년 12월 1일 시점에서 86%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갱신했음
  - 일본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인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, 이에 한일 각각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
- 일본은 영어가 유창하고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가 부족한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면 상호 윈윈임
  - 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유력한 지지층인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으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임
  - 따라서 한국의 청년들이 일손부족상태에 있는 일본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면,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 한일경제협력도 확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됨
- 이와 관련하여 한국 청년들의 일본기업 취직확대나 사회보장협정의 개정 검토 등이 2017년 12월 한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도 의제로 된 바 있음
-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발표된 일본의 외국인수용 확대책제안에 한일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취업비자나 입관절차의 간소화,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확대, 연금제도의 재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임
  - 최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의하면(2018년 2월 2일자), 현재 한일 간에 연금가입기간의 통산조치는 없다고 함
  -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액이나 가입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양국을 걸치고 취업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얻기 전에 귀국하면 소용이 없음
  - 만일 양국에서 노동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, 한일을 왕래하면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됨. 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8.2.2./2.21.)